

‘로봇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기술로’

-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개최, 대체불가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 방안 추진 -

- 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기술로 - 휴머노이드 ‘독자 풀스택’에 2.3조원
- ② 공장·농밭·공사장·항만·군부대에 로봇이 들어간다 - 8대 분야 실증에 2.8조원
- ③ 될 기업 300곳, 5년간 최대 100억원 - “나눠주기”를 끝내고 “키우기”로
- ④ 낡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 걷어내 4조원 절감 - 아낀 돈은 전액 다시 기업에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8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었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대체불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투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민간위원 13명과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차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 ②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 방안, ③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④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등 4개 안건이 논의·확정됐다.

박 장관은 “글로벌 AI 시장이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를 ‘우리 경제의 다음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대응을 강조하며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 먼저 알아두면 좋은 세 가지 용어 >

- ▶ **피지컬 AI**: 지금까지 화면 속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여기에 몸을 달아준 것이 피지컬 AI이다. 물건을 집고, 옮기고, 조립한다.
- ▶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팔과 다리를 갖춘 로봇을 말한다. 공장 설비를 뜯어고치지 않아도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 **풀스택(full stack)**: 로봇의 두뇌(AI모델)·신경(운영체제)·눈과 손(센서·부품)·심장(배터리)까지 한 벌을 통째로 갖추는 것을 말한다. 어느 하나라도 외국 것에 기대면, 나머지를 다 만들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①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 -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기술로, 2.3조원

정부는 2027년 0.6조원, 2030년까지 총 2.3조원*(민간 매칭투자를 포함하면 2.7조원)을 투입해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키운다. 2030년까지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를 갖추고, 현재 45% 수준인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 정책금융을 제외한 재정 지원만 따진 규모로,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AI·로봇·반도체 등 피지컬 AI 관련 분야에 별도로 16조원 공급 예정

왜 지금인가?

휴머노이드 시장은 아직 문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25년 15억 달러에서 2035년 38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골드만삭스). **지금 앞서가는 나라가 기술과 표준을 결정하는 국면**이다. 미국은 빅테크가 범용 플랫폼 선정에 나섰고, 중국은 정부 지원을 업고 대량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에게는 남다른 강점이 있다.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1,220대로 세계 1위**이고(IFR, 2024), 반도체와 배터리에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 있으며,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같은 **로봇을 써 볼 현장**이 준비하다. 반면 대규모 투자를 이끌 선도기업이 없어 개발이 연구소와 중소기업 단위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자본도, 중국의 규모도 아닌 ‘현장’으로 승부

정부는 ‘**수요 현장**’을 개발의 구심점으로 삼기로 했다. 다양한 산업현장과 반도체·배터리 기업을 함께 가진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 순서도 작업 조건이 일정한 **제조·물류(2028)에서 시작해 실외·비정형 환경(2030), 집안일·돌봄(2035)**으로 넓혀 간다.

<사례 ①> “AI 기업은 모델만, 로봇 기업은 하드웨어만”- 끊긴 고리를 정부가 잇는다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AI 기업은 모델만, 로봇 기업은 하드웨어만 만들고, 제조기업은 현장을 좀처럼 열지 않는 **분절된 구조가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이다 (피지컬 AI 기업 A社)”

정부는 이 끊긴 고리를 **매칭**으로 잇는다. 삼성디스플레이·KAI·대한통운·삼성중공업·HL만도·LG전자·SK에너지·한림대병원·호텔롯데 등 **10대 업종 대표 수요기업**과 레인보우로보틱스·로보티즈·에이로봇 같은 **국내 로봇기업**이 짝을 이뤄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함께 개발한다. 과제당 40억원 내외의 개발비를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 언패킹·검사나 물류센터 소포 피킹·포장** 같은 실제 작업으로 현장에서 검증한다.

첫 손님은 정부가 - '30년까지 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 구매

아무도 사주지 않으면 양산도 없다. 정부가 직접 첫 손님이 되기로 한 이유다. 국산 휴머노이드를 2027년 250대, 2030년까지 1,080대를 사들여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 등에 보급하고, 연구과제를 함께 부과해 실제로 쓰이도록 한다. 지금 국내 주요 대학 중 일부는 이미 중국산 휴머노이드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있다. 보급 로봇은 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국산화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4족 보행 로봇 등 비(非)휴머노이드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로봇 구매는 2027년 약 1,700대, 2030년까지 약 5,000대로 늘어난다.

부품·소프트웨어·데이터·사람

- (부품) 전동화로 일감이 줄고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 전환을 돕는다. 기술 원리와 생산 역량이 닮아 기존 제조 역량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 로봇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관절)·로봇손·센서 3대 취약부품 연구개발 사업을 새로 만들고,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와 휴머노이드 전용 전고체 배터리도 함께 개발한다.
- (로봇 SW) 현장의 특정 작업을 하는 가벼운 모델을 먼저 만들어 산업별로 넓혀가는 한편,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정밀 조작까지 하는 범용 모델도 나란히 개발한다. 로봇의 두뇌·몸체·반도체를 잇는 휴머노이드 운영체제(OS)도 2031년까지 국산화해 풀스택을 완성한다.
- (데이터) 부처별로 흩어져 활용도가 낮았던 제조·피지컬 AI 데이터를 범정부 통합 라이브러리에 모으고, 유출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클린룸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모델 학습에 제공한다.
- (사람) AI 지식뿐 아니라 로봇·산업현장 지식까지 갖춘 제조 AX·피지컬 AI 인재를 2030년까지 약 2만 명 키운다. 세계 최고 대학에 청년인재를 파견하고, 지역 거점대학과 협력해 실무인력도 연간 약 3,000명 배출한다.

<사례 ②> 로봇 관절의 힘이 5배로 - 숫자로 보는 2030년의 목표

액추에이터(로봇 관절)는 같은 무게로 내는 힘을 5배(35→165Nm/kg 이상)로 키우고, 반복 사용 횟수도 30만 회→100만 회 이상으로 늘린다. AI 반도체는 전기를 30W 이하만 쓰면서 초당 400조 회를 계산하도록 만들며,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350Wh/kg에서 450Wh/kg으로 높인다. 사람 곁에서 오래, 힘 있게, 안전하게 일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다.

②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 로봇이 실제로 일하는 현장 500곳, 2.8조원

정부는 2027년 0.7조원, 2030년까지 2.8조원(민간·지방비 매칭 포함 4.0조원)을 들여 자율제조(산업부)·중소제조(중기부)·농업(농식품부)·건설(국토부)·물류(과기정통부)·항만(해수부)·돌봄(복지부)·국방(국방부) 8대 분야에 피지컬 AI를 실증한다. 2027년 한 해에만 500개 이상의 현장에서 실증이 이뤄진다.

피지컬 AI는 현장에서 굴러봐야 실력이 는다. 그런데 영업기밀 때문에 현장의 문이 열리지 않아, 기업 혼자서는 시험해 볼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정부 지원도 기반기술과 제조 분야에 몰리고 부처별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방안은 ‘기술 → 실증 → 기업성장’의 선순환을 범부처 협업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원칙은 두 가지다. 첫째, 과기정통부·산업부가 개발한 국산 기반기술을 각 부처 실증에 적용해, 우리 현장이 외국 플랫폼의 시험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수요기업과 국내 AI·로봇·부품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실증 수요가 곧바로 매출과 레퍼런스로 이어지게 하고, 성능이 확인된 제품은 보급·구매·인증 등 후속사업으로 연결한다. 실증에서 나온 영상·센서·로봇 행동 데이터는 표준화해 범정부 차원에서 쌓고, 다시 국내 기업의 모델 학습에 돌려준다.

<사례 ③> 로봇이 그동안 못하던 일 - 구겨진 옷, 부드러운 빵, 제각각인 소포

자동화가 비켜 간 자리는 대개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일’이었다. 구겨진 의류를 집어 펼치고 개는 공정, 부드러운 빵을 부서지지 않게 트레이에 담는 작업, 무겁고 날카로운 프레스 자재를 옮기는 위험 공정이 그렇다. 중기부는 이런 공정의 표준모델 118개를 확보해 한 공장에 통합 적용하고, 「로봇을 활용한 똑똑한 공장」 10곳을 만든다. 물류도 마찬가지다. “박스 형태가 제각각이라 기존 방식으로는 자동화가 어렵다”는 현장의 말처럼, 과기정통부는 초소형·비정형 소포까지 집어내고 목적지 바구니에 정확히 넣는 등 물류 특화 모델을 개발해 국산 로봇 100대에 실어 우정사업본부 현장에서 검증한다.

일손이 부족한 곳부터

- (농업)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15개소에 AI 농기자재 공유센터를 두어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첨단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한다. 선도농가, 공동영농법인 등에는 AI 농업로봇 210대를 보급한다. 농장 출입통제-소독-예찰은 소독 로봇과 열화상 드론으로 대체한다.

- (건설) 웨어러블·원격조종·정밀시공·시공자율화 등 5대 기능 실증용 테스트 베드를 지정해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제작 특례를 준다. 실증랩에서 미리 검증한 뒤 현장에 투입하고, 인증을 거쳐 도입비용까지 지원하는 상용화 경로를 만든다.
- (항만)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기능과 무인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하나로 합친 장비를 실제 항만 터미널에 투입해 검증한다.
- (돌봄) 인구감소지역 요양시설 10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이동·이송·재활보조 로봇을 배치하되, 로봇만 두지 않는다. 공간 동선 정비, 업무절차,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까지 묶어서 지원해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돌봄 모델을 만든다.
- (국방)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위험하고 전투가 아닌 임무부터 로봇이 맡는다. 포병부대의 험지 탄약 운반을 무인 차량으로 자동화하고, 취약한 경계근무에는 휴머노이드와 정찰 드론을 배치해 24시간 무인 경계체계를 실증한다. 의료폐기물·폭발물 취급에도 밀폐형 자율이동로봇을 도입한다.
- (물류) 초소형·비정형 소포 분류 작업 등 물류 분야의 현실적이고 도전적이며 실효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국산 NPU, 국산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R&D 성과를 바로 실증으로 연결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 (산업) 개별 기업을 넘어 공급망 단위로 AI를 확산한다. 앵커기업의 AI가 수요를 예측해 생산계획을 세우면, 협력사의 AI가 이에 맞춰 품질을 검사하고 설비 고장을 미리 잡아내는 방식이다. 중견기업이 센서·비전 카메라·데이터 서버 같은 제조 AX 필수설비에 투자할 때 30~40% 보조금도 새로 지원한다.

※ (참고)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국산 휴머노이드 구매 등 사업은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 「법정부 피지컬 AI 실증」 안건의 재정투자 규모에 중복 포함
(중복 규모는 '27년 약 0.2조원, '27~'30년 약 0.8조원 수준)

③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 될 기업 300곳, 5년간 최대 100억원+α

정부는 新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4대 분야에서 매년 300개사를 선발해 최장 5년, 기업당 최대 100억원+α을 집중 지원한다. 소액·분산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맞춤형·묶음·장기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2027년에는 2,388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해졌다. 3년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오른 고성장 기업 비중은 2009~2011년 14.4%에 2020~2022년 7.8%로 반토막이 났다. 2024년에는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기업이 328개인 반면, 중견에서 중소로 내려앉은 기업이 427개로 더 많았다.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다시 잇되, 중소·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 대표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취지다.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의 지원은 ‘분절’과 ‘나눠먹기’라는 한계가 있었다. 부처마다 칸막이가 있어 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 인프라 제공이 따로 놀았고, 몇천만원짜리 일회성 지원금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쓰이고 끝났다. 자금이 치우치다 보니 규제 개선, 실증·인증, 초기 판로처럼 돈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병목에는 대응이 부족했다.

새 프로그램은 선정 → 컨설팅 → 묶음지원 → 성과관리 순으로 이뤄진다. AI·빅데이터 분석과 민관합동평가단 심사를 거쳐 4대 분야 중소기업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300개사를 뽑고, 소관부처가 추천한 ‘성장 디렉터’를 1대1로 배정해 성장전략과 마일스톤을 함께 설계한다. 그 결과에 맞춰 R&D·보증·유자·수출바우처·인력 지원을 한 묶음으로 제공하고, 2년 뒤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성과를 낸 기업만 3년을 더 지원한다.

<사례 ④> 新안보 분야 A사가 받게 되는 5년(예시)

1년차에 성장 디렉터가 붙어 성장전략을 짠다 → 新안보 모태펀드에서 25억원 투자를 받고, 공공수요와 연결된 R&D를 5년간 이어간다 → 그 사이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와 시제품·실증·인증 비용을 지원받고 → 물건이 나오면 수출성장패키지로 바이어를 찾고 시설자금 15억원으로 생산능력을 키운다. 흩어져 있던 자원을 한 기업의 성장 순서에 맞춰 다시 배열한 것이 핵심이다. 각 사업의 최소 요건만 확인하고 기존 평가 절차는 생략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한다.

분야별로 막힌 곳을 뚫는다

- (新안보) 美 CIA가 세운 벤처투자기관을 본뜬 ‘한국형 인큐텔(IQT)’을 신설해 정부가 핵심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군 부대와 국방 데이터를 테스트 베드로 제공한다. 획득 제도도 공모형·애자일 방식으로 바꿔 첨단기술이 빠르게 군에 들어가도록 한다

- **(제약·바이오)**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R&D,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임상 검증, 임상 진입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병원이 가진 **의료 장비와 데이터**도 함께 쓸 수 있게 한다.
- **(기후테크)** 규제특례와 공공 시범구매로 초기 판로를 열어주고, 6,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 **(K-소비재)** 대기업 현지 유통망 입점과 K-콘텐츠 연계 마케팅을 지원하고, 해외 규제 대응과 상표·지식재산 침해 대응도 돕는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K-뷰티 클러스터**를 만든다.

④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 232개 사업 정비, 4조원 절감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2개 부처, 671개, 31조원 규모다(2026년 기준). 그런데 이 가운데 50억원 미만 소액사업이 46.1%, 기업 한 곳에 5,000만원도 채 주지 않는 사업이 23.2%다. 비슷한 사업이 부처마다 따로 있고, 성과가 나지 않는데도 해마다 그대로 이어지는 사업도 적지 않았다. 예산과 행정 낭비될 뿐 아니라, 공고가 쏟아져 정작 기업이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7개 부처 472개 사업, 25.5조원을 **효율화 대상**으로 정하고 전면 점검했다. 그 결과 232개 사업(약 50%)을 정비해(88개는 통폐합·폐지, 144개는 감액),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약 4조원(△16%)을 절감했다.

어떤 사업을, 왜 정리했나 - 세 가지 유형

첫째, **유사·중복 사업**이다. 목적도 대상도 같은 사업이 부처마다, 심지어 한 부처 안에서도 여러 개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할지 모르고, 같은 일에 예산을 두 번 쓰는 경우가 있었다.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비를 산업부와 중기부가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둘째, **소액·나눠주기 사업**이다. 한 기업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돌아가는 지원금은 당장의 경영 애로를 넘기는 데 쓰이고 끝났다. 회사가 한 단계 올라서는 데는 힘이 되지 못한다. 한국은행도 우리 중소기업 지원이 ‘선별’보다 ‘보편 지원’에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50억원이 안 되는 사업 196개를 143개로 줄이고, 기업당 5,000만원 미만 106개 사업 중 12개를 폐지하고 32개 사업은 감액 조치했다.

셋째, 성과가 없는데도 해마다 그대로 지원하던 사업 30개 사업비를 감축했다. 예산을 배정해도 다 쓰지 못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이 좀처럼 크지 않는 사업도 있었다.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경제 여건이 바뀌어 필요가 없어진 사업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기도 했다. 2024년~2025년 성과평가에서 '개선 필요' 판정을 받은 34개 사업 중 16개(47%)는 오히려 이듬해 예산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총 1.3조원을 절감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성과가 검증된 사업과 신규 랜드마크 사업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기업을 심사할 때 성장성과 잠재력을 먼저 확인하고, 비수도권 기업은 지원 한도와 국비 지원비율을 우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이날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총괄과	책임자	과 장	황희정 (044-214-1810)
		담당자	사무관	김진영 (jeanghim@korea.kr)
			사무관	박원준 (parkwj777@korea.kr)
			주무관	현민섭 (hms6370@korea.kr)

<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 >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혁신경제전환과	책임자	과 장	신명석 (044-214-1630)
		담당자	사무관	심정민 (jmini1214@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책임자	팀 장	송창종 (044-202-6250)
		담당자	사무관	이주연 (jy1122@korea.kr)
		담당자	사무관	윤홍준 (yhjune644@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	책임자	과 장	유은실 (044-202-4570)
		담당자	사무관	김영희 (yhkim3412@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국현 (044-202-6320)
		담당자	사무관	김주호 (zmk4861@korea.kr)
	산업통상부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책임자	과 장	이동철 (044-203-4310)
		담당자	사무관	여정모 (yjm7001@korea.kr)

<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방안 >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혁신경제전환과	책임자	과 장	신명석 (044-214-1630)
		담당자	사무관	심정민 (jmini1214@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책임자	팀 장	송창종 (044-202-6250)
		담당자	사무관	이주연 (y1122@korea.kr)
		담당자	사무관	윤홍준 (yhjune644@korea.kr)
	국방부 국방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윤태 (02-748-6042)
		담당자	사무관	성양현 (syh78@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	책임자	팀 장	차희수 (044-201-2711)
		담당자	사무관	심영건 (hiyg@korea.kr)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순목 (044-203-3830)
		담당자	사무관	박주형 (digimon516@korea.kr)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044-202-3240)
		담당자	사무관	최신혜 (choish32@korea.kr)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명주 (044-201-3549)
		담당자	사무관	안일찬 (ilchan05@korea.kr)
	해양수산부 첨단항만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전찬수 (051-773-6060)
		담당자	사무관	김도윤 (doyoon1@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민수 (044-204-7260)
		담당자	서기관	기정희 (keejungh@korea.kr)

<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필 (044-204-7420)
		담당자	사무관	김건영 (abcd13579@korea.kr)
	기획예산처 혁신경제전환과	책임자	과 장	신명석 (044-214-1630)
		담당자	사무관	김재현 (z56543@korea.kr)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책임자	과 장	정희철 (044-214-2730)
		담당자	사무관	한현철 (hanhc@korea.kr)

< 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필 (044-204-7420)
		담당자	사무관	김건영 (abcd13579@korea.kr)
	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	책임자	과 장	오현경 (044-214-1830)
		담당자	사무관	전찬익 (jky820@korea.kr)